

# 상위권 40명만을 위한 학교... 성적지상주의가 부른 '타락 교육'

## 시험문제 유출 파문 광주 고려고 '내신 몰아주기' 행태 경악

시험문제 유출 사태로 불거진 광주 고려고 고등학교의 '내신 몰아주기'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성적상위권 학생이 서술형 문제 답안을 '빈칸'으로 제출해도 점수를 주는가 하면, 같은 답에도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줬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학교법인 고려학원 산하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비롯한 상위권 학생의 특별관리와 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등을 적발했다.

오답을 정답 처리하거나, 정답을 오답으로 채점하는 등 서술형 문제 점수를 조작한 것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수천 건에 달했다.

답을 적어내지 못해 '빈칸'으로 제출한 상위권 학생에게 점수(5점)를 줬고, 똑같은

답을 적었지만 상위권 학생에게 7점, 일반 학생은 3점을 주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채점에 대한 기준 없이 교사가 '알아서' 점수를 준 뒤, 채점기준표를 만들도록 한 학교의 방침 때문이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출제 한 시험문제와 함께 시험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고려고는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했다. 상위권 학생의 답을 보고 채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고려고가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성적표 발송 일정 등을 늦춘 적도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고려고는 그동안 성적 순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합대상자를 고려하

답안 빈칸 제출해도 점수 주고

같은 답도 일반학생보다 높은 점수

오답을 정답 처리 등 성적 조작

채점 기준없이 교사가 '알아서'

성적우수 학생만 기숙사생 선발

자습실·책상 등 시설도 차별

광주시교육청 특별 감사

교장 파면·교감 해임 요구

교사 52명 징계·행정처분 계획

지 않은 채 성적우수 학생만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해 특별교육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3학년 301명 가운데 문과 10명·이과 30

명 등 40명이 심화반으로, 이중 38명이 기숙사생이었다. 이들에겐 일반 학생은 기회조차 없는 과목별 방과후학교-자율동아리-토요논술교실을 연계한 심화된 교육활동이 제공됐다.

특히 심화반 학생들에겐 방과후 냉방시설이 설치된 자습실과 일반 학생의 책상보다 배 이상 큰 책상을 제공하는 특혜까지 줬다.

교육과정 역시 말 그대로 '파행'이었다. 상위권 학생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일반 학생들이 '들러리'로 활용됐다.

실제 고려고는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논리(?) 아래 8개(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의 선택 과목 중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과학 I'·'물리학 I'·'물리학 II'만을 필수로 지정·운영했다.

다른 일반계 고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II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하고, 상위권 학생의 내신성

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

'논술'과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시간도 영어와 수학 수업으로 대체해 운영했다. 주당 각각 4시간 이뤄지는 3학년 '화학II'과 '지구과학II'의 절반은 물리 수업으로 대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입 학교장추천 전형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고려고 자체 규정에는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했다. 추천 학생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었던 데다, 학교운영위원회 지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7일 3학년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수학동아리 학생에게 사전 시험문제를 제공한 것 외에도, 지난해 1학년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도 9개 문제가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이 사용한 교재에서 출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의뢰하기로 했

다.

이밖에 수학은 2017~2019년 시험문제 중 고난도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특정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와 일치했다.

국어도 2018~2019년 16개 문항이 100% 같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제가 특정 학생에게 미리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법원에 고려고 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부장교사 4명에 대해서도 징계 3개월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나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고려고 전체 교사가 60여명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교사가 징계-수사를 받게 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후배가 인사 안한다며 흥기 휘두른 60대 입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은 13일 후배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박모(6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완도군 청산도 본인 집 앞에서 후배 정모(59)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가슴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완도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후배 정씨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범행 후 스스로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과학수사 체험 신기해요” 13일 광주시 광산구 어린이교통공원 내 KCSI 과학수사 체험관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자녀들이 지문·족적채취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체험관은 매월 1~2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대법원 “버스기사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만 해당”

###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판결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 해당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도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서

틀버스’를 운행하던 운모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광도상을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운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운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운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운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목포 해상서 30대 선원 실종

해상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목포시 삼학도 남항 부두 인근 해상에서 투포 중인 어선 A호(19t·승선원 7명)에서 선원 B(38)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정 1척·연안구조정 1척·헬기 1대·서해특구대 등을 급파해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하고 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경찰, 광주 클럽 특혜조례 관련 주류업계 로비 의혹 수사

경찰이 광주시 서구·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광주일보 2019년 8월 8일자 6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13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류 유통업계 일부 사업주들과 서구·북구·동구 지역 일부 구의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

인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동구의회에서는 같은 시기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논의됐으며, 당시 동구의회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춤 허용 업소 지정’ 조례를 수차례나 발의했다. 2017년 7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북구에선 조례 제정 전에 열린 주민공청회에 실제 지역 주류판매유통업자가 직접 나서 찬성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로비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일부 주류유통업자들이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을 위해 구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나온 만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주류업계와 구의회 간 로비정황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나란히 고발 당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와 자신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

○...13일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주옥순 대표와

유튜브채널 ‘이승만 TV’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이 저의 외증조부”라고 말한 이영훈 교수를 서울구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애국국민운동대연합 관계자는 “주대표는 애국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 교수가 말한 독립운동가 조상은 외증조부가 아닌 외외증조부였다”면서 “외외증조부는 자신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010-3605-5000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